

01

FTA 포커스



01

FTA 포커스

- 2014년도 관세청 FTA 집행 운영방향



이명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I. 머리말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 아세안, EU, 미국 등 총 9개 협정, 46개국¹⁾과의 자유 무역협정(FTA)을 발효 중이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전체 교역액의 36%(2013년 교역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FTA 중심 국가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FTA 네트워크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2013년 2월 정식 서명된 한-콜롬비아 FTA는 국회비

준 동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호주 FTA는 2013년 12월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리고 중국과의 FTA도 2013년 9월 제7차 협상에서 1단계 모달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 협상²⁾을 마무리하고, 제8차 협상(2013년 11월)부터 개별 품목의 관세양허 협상, 협정문안 논의 등 2단계 본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개별회원 국가도 관세양허 확대 등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관련 있는 한-중-일 FTA 및 RCEP³⁾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참고> FTA 추진현황 /

(교역비중은 '13년기준)

구분	발효(46개국)	협상타결(3국)	협상중(15개국)	여건조성(19개국)
상대국가	칠레, EFTA,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RCEP,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 GCC, Mercosur,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
교역비중	36.0	3.9	30.4	14.8
누적비중	36.0	39.9	70.3	85.1

1) 칠레, 싱가포르, EFTA(4), 아세안(10), 인도, EU(27), 페루, 미국, 터키

2) 상품분야의 경우 품목군별(일반-민감-초민감)로 구분,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품목을 자유화하기로 함

3)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아세안 10개회원국 및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간 역내 무역자유화 협정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과 FTA를 맺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기업들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돕는 것이다. 비단 우리나라만 이와 같이 FTA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FTA 네트워크 확대 경쟁으로 치달고 있다. 이제 FTA는 우리 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고 있으며 FTA를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은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다. FTA를 新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총괄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관세청의 주된 임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FTA를 악용한 불법·부정무역을 원천 차단하여 비원산지 물품의 특혜 무임승차(Free Riding)를 차단하고, 상대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쟁점을 해소하여야 한다.

II. 2013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EU, 미국 등과의 FTA 발효 이후 높아진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원스톱 지원센터」운영이다. FTA 원스톱 지원 센터를 전국세관에 설치하고 전문상담관이 애로사항을 직접 해소하는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기업상담·진단·컨설팅 연계 등을 통해 1,532건의 FTA 활용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제공이다. FTA 활용 역량에 따라 전문 관세사 등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FTA-PASS 구축에서부터 인증수출자 지정, 원산지 검증대비 진단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한-미 FTA의 수출활용률은 2012년말 68.9%에서 2013년말에는 76.1%로 향상되었고, 한-EU FTA도 인증수출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불과 발효 2년여만에 80.8%의 높은 수출활용률을 나타냈다.

셋째, FTA 부정·불법 수입 차단이다. FTA 부정·불법 수입에 대한 원산지 검증 강화를 통하여 전년대비 293% 증가한 625억원을 추징하였으며, 대기업 CEO 간담회, 검증 프로세스 개선, 매뉴얼 발간 및 교육체계 개편 등을 통해 자발적 법규준수를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넷째,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지원정책도 추진하였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합하고 기업의 FTA 전문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하여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FTA 상설교육센터」등을 통하여 기업실무자, 전문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취업희망자와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취업박람회 등을 통하여 195명의 FTA 전문인력 취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국가간 복잡·다양한 원산지 제도에 대한 조화방안을 모색하여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하였고, 「FTA 활용애로 해외 현장 해결팀」을 운영하여 우리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를 신속히 해결하였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전산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FTA 활용지원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FTA 조기 정착에 기여하였고, FTA 특혜

무역을 악용한 우회수출입 등에 대한 단속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FTA 부정무역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III. 2014년도 FTA 행정 중점 추진방향

국내외 FTA 혜택이 일반화되고, 기업 경쟁이 심화되어 중소기업의 FTA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금년도에는 EU, 미국 등의 경기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FTA로 인한 글로벌 시장진출 기회는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FTA 네트워크 및 FTA를 통한 교역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수요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는 수출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이를 뒷받침할 제도, 시스템, 지원활동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중소기업들이 변화하는 FTA 교역환경에 잘 적응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반면, FTA 활용이 증가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FTA 원산지검증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의 영원한 핵심과제는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통관 절차 이행이다. FTA에서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이 FTA 활용을 확대하면서도 검증의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새롭게 안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4년도 FTA 행정의 중점 추진과제를 정립하였다. 첫째,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가속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한-중 FTA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셋째, FTA 이행체제 선진화를 통한 특혜교역을 확대하는 한편, 넷째,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무역을 구현하고, 마지막으로 FTA 관세외교를 강화하고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추진한다.

1. 중소기업 FTA 활용을 가속화하는 환경 조성

첫째,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FTA특례법에 중소기업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⁴⁾하여 안정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원산지 확인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2월부터 원산지확인서의 세관장 사전확인제도⁵⁾를 전국세관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셋째, 오프라인 지원 외에 온라인 상의 '기업별 전담관'을 편성하여 전담상담관이 해당 기업의 FTA 활용 애로 등을 이력관리하면서 기업체가 이해될 때까지 지원하고 있다.

2. 한-중 FTA 등 동북아 경제통합에 선제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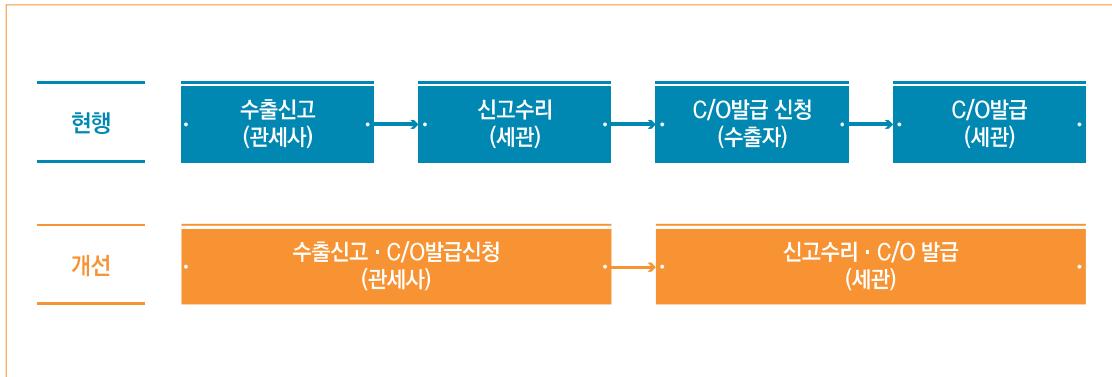
첫째,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FTA 행정 발전기반을 조성한다. FTA를 통한 동북아 경제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계·학계·유관기관 등 FTA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립하여 新 FTA 무역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FTA 행정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재)국제원산지정보원에 내부전문가·법무법인·관세사·학계 등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산지 학회」를 신설하여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기업의 원산지발급능력을 제고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원스톱 발급시스템⁶⁾」을 구축할 계획이다.

4) 중소 수출기업과 수출용 원재료 제조기업에 대해 FTA 활용 관련 상담·교육 등의 지원사업이 가능토록 규정

5)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부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여 주는 제도

6) 원산지 증명서 신청항목의 중복입력 부담을 없애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관세사의 원산지증명서 심사 확대로 신뢰성 제고



셋째, 본격적인 FTA 시대에 대비하여 관세행정 내·외부 인적자원의 FTA 활용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FTA 전문 컨설턴트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하여 FTA 전문 관세사를 육성하고, 지역 FTA 특성화고 지정사업 등을 통하여 FTA 실무인력을 양성하여 기업고용까지 연계를 지원할 나갈 계획이다.

3. FTA 이행체제 선진화를 통한 특혜교역 확대

첫째, Local 수출자 인증 도입 등 인증수출자제도를 개편한다. 수출자에 한정하고 있는 인증수출자 대상을 '수출용 원재료 생산자(로컬 수출자)'에게도 업체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하여 원산지 관리역량을 제고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1월부터 인증수출자 증가에 대비하여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예비조사 민간 위탁 주관기관을 기존 서울세관에서 인천·대구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둘째, FTA-Hub망 기반확충으로 전자 원산지 증빙서류 유통을 확산한다. 원산지확인서 등에 기재되는 각 협정 품목별 원산지기준 코드를 제1류에서 제97류까지 HS 6단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FTA 전자서류 유통을 지원하고, ERP 미사용 영세기업도 FTA-PASS와 손쉽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엑셀형 연계모듈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셋째, 개성공단 및 검증 특화형 FTA-PASS를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한다. 협정별 역외가공 규정을 반영한 FTA-PASS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개성공단의 FTA 활용을 제고하고, 세관 검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원산지 판정 입증 서류 자동추적, 자가 검증 툴(Tool)을 구축하여 제공할 것이다.

4.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통한 공정무역 구현

재정확보 및 FTA 악용차단을 위한 원산지검증을 강화한다. 원산지 위험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정보수집 채널 다양화 및 분석체계 강화를 통해 FTA 교역증가에 편승한 부정·불법 무역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증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기로 하였다. 검증대상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세관별 「정보분석심의회」를 설치하고, 검증 처분의 객관성·일관성 확보를 위해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세관별 「검증결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을 확정하는 등 검증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

5. FTA 관세외교 강화 및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

세계관세기구(WCO)와 공조강화 등을 통한 원산지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WCO에서 우리나라의 원산지 제도를 홍보하고, WCO 원산지 자문단 그룹에 참가함으로써 원산지 국제표준화에 공조하며, 외국세관 전문가·학계 및 국제원산지 정보원 등이 온라인 상에서 원산지 정보의 교환 및 표준화를 논의하는 포럼을 추진한다.

또한,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FTA 해외 통관애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의성 민원·규정 해석 상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국내외 통관애로 접수·처리를 전국으로 통합관리하고, 상대국 세관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적시에 FTA 통관애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IV. 맺음말

거대 경제권과의 FTA 발효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FTA 활용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기반 구축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수 밖에 없다. 단기간에 많은 FTA가 발효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점도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 성공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산지규정과 같은 새로운 규범과 제도가 도입되고 새로운 수출시장 진출,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형 발굴 등 FTA 이행에 따르는 많은 과제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되

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 중심의 한 노력은 이러한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였다.

FTA 시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인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FTA를 기업성장의 호기로 활용하고, 관세청은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